[공약 요청서]

영유아교사 권리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요청서

— 영유아교사와 교육감이 함께 만드는 3 대 핵심 공약 —

수신: ○○교육감 후보 귀하

발신: 영유아교사협회

2026. 04. 28.

Ⅰ. 요청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교사협회입니다.

먼저 영유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요청서는 교육감님과 함께 영유아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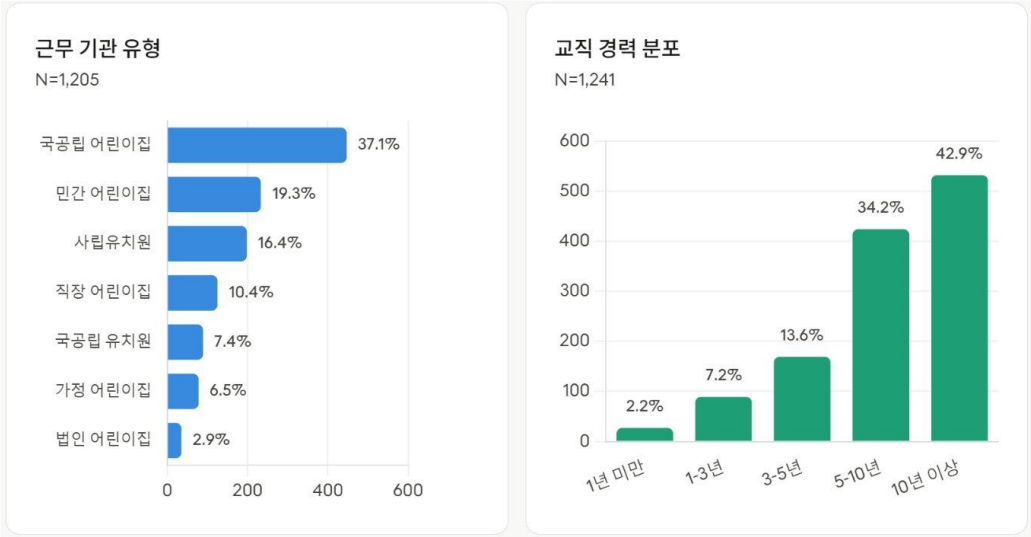
최근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사건 (2026.2.14)**
>
>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의 20 대 여교사가 B 형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74%가 독감에 걸려도 출근하고, 98%가 "내 처지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는 이 사건이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현장 전반의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
> **독감에도 출근한 사유:**
>
> 대체 인력 부족(71.0%), 관리자 눈치(67.6%), 동료에 대한 미안함(58.5%)

이 사건이 보여주는 과제 — 대체인력 부재, 병가 사용의 어려움, 관리자의 묵인, 사립 운영기관의 사각지대 — 는 교육감님 한 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도, 협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시도교육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협회는 교육감님이 이 변화의 시기에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3 대 핵심 공약과 3 대 부수 공약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본 요청서의 근거 — 현장 응답자 분포 】



근무 기관 유형 (N=1,205) / 교직 경력 분포 (N=1,241) — 본 요청서는 1,200 여 명의 영유아교사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Ⅱ. 3 대 핵심 공약 개요

구분	공약 내용	교육감 권한	예산 부담
공약 1	**점심시간 = 근로시간 인정** 1 시간 휴게시간 실질적 보장	**조례 + 지침 + 재정 연계**	**0 원**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 + 상시 대체교사** 부천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	**교육감 권한**	**예산 수반**
공약 3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 기관장 평가 · 지원 · 교육 체계	**교육감 권한**	**0 원**

본 요청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교육감님이 임기 내 실현 가능하고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가장 적은 순서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성공이 곧 영유아교사의 성공이며, 나아가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Ⅲ. 공약 1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1 시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핵심 메시지

영유아교사에게 점심시간은 식사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초·중·고 교사와 동일한 기준이 영유아 현장에도 필요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 영유아 식사 지도는 5 분 만에 마시듯 먹어야 하는 노동의 시간입니다.
- 9 시간 근무 중 1 시간 휴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초·중·고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영유아교사는 예외입니다.
- 현장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 순위 개선 과제입니다 (전체 응답의 약 27%).



문항 4. 휴게시간 사용 (N=1,244) — 부정 응답 86.9%로, 현장 교사 10 명 중 9 명이 법정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함께 추진할 사항

1. 시도 조례 제정 —「영유아교사 처우개선 조례」또는 기존 조례 개정으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시

2. 교육감 행정규칙·지침으로 관할 기관에 점심시간 근로 인정 운영 권고
3. 시도교육청 보조금·지원금 지급 조건에 "17 시 퇴근 운영" 또는 "1 시간 휴게 실질 보장" 포함
4.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단계적 적용 후 사립·민간으로 확산하는 모델 구축
5. 17 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입법 건의 (근로기준법·영유아보육법 개정)

3. 권한 · 예산 · 실현 가능성

- 권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 사항이지만, 시도 조례 제정 · 행정규칙 · 재정 지원 조건은 교육감님 권한입니다.
- 선례: 경기도교육청「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례」등 유사 조례가 이미 운영 중입니다.
- 예산: 추가 예산 없이 조례 제정과 행정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 효과: 조례 제정만으로도 관할 영유아 교육기관에 사실상 의무로 작용합니다.
- 의의: 교육감님께서 보육·유아교육 통합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실 수 있는 공약입니다.

Ⅳ.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과 상시 대체교사 배치로 부천 사건 재발을 방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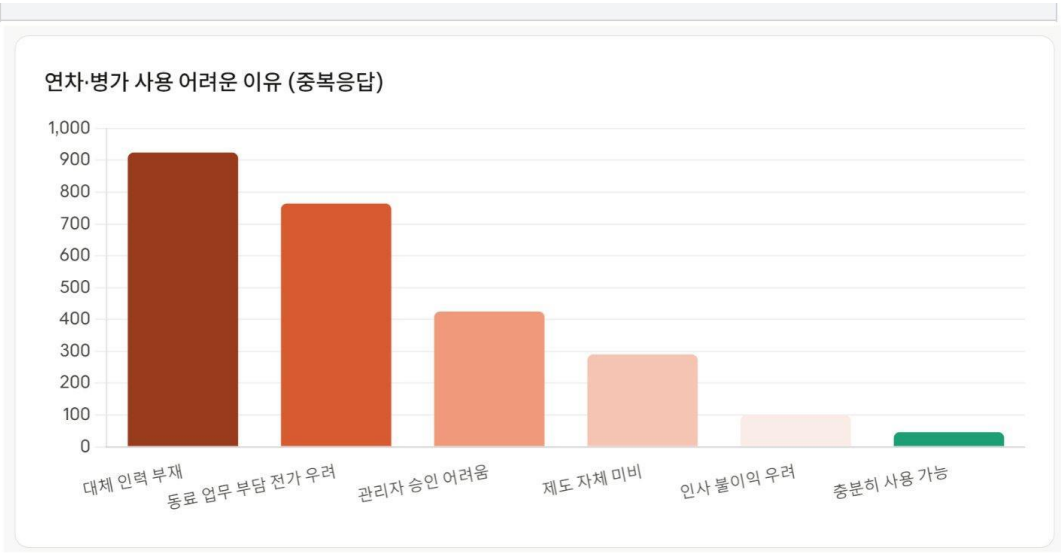
핵심 메시지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교육감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 부천 故○○교사 사망(2026.2.14): B 형 독감 확진 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
- 사립유치원 교사 74%가 독감에 걸려도 출근, 98%가 "내 처지와 유사하다" 응답
- 17 개 시도교육청 중 11 곳이 병가 대체인력 미지원 (2025 년 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령 22 조의 등교중지는 재량조항이라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연차·병가 사용 어려운 이유 (중복응답) — '대체 인력 부재'와 '동료 업무 부담 전가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아, 부천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 함께 추진할 사항

1. 법정 감염병 시 출근 강요 금지 — 교육청 지침으로 선제적 시행
2. 법정 감염병 시 병가 사용 의무화를 위한 입법 건의 (재량 → 의무)
3. 각 기관에 상시 대체교사 1 명 이상 배치 (경남 보결전담교사 모델 참고)
4. 당일 병가 사용이 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
5. 부천 故○○교사 1 주기(2027.2.14)를 시행 시점의 상징적 목표로 설정

3. 권한 · 예산 · 실현 가능성

- 권한: 대체교사 배치는 교육감님의 핵심 권한 영역입니다.
- 예산: 3 대 공약 중 유일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 명분: 부천 사건의 사회적 공감대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입니다.
- 연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모두가 환영할 공약으로, 추진 동력이 충분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 故○○교사의 1 주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교육감님께서 직접 발신해 주신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한 사회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Ⅴ. 공약 3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을 명료화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핵심 메시지

법은 이미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기관장님들을 든든히 받쳐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현장 설문에서 "원장 재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기관장님들이 일부러 법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양심적인 기관장님과 그렇지 못한 기관장님 사이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원장 재량이니까 호봉 기준이 다르다"
- "원장 재량이니까 연차 사용 시점이 다르다"
- "원장 재량이니까 휴게시간 운영이 다르다"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기관장님들도 이 기준의 부재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평가 시스템은 "잘하시는 기관장"에게는 정당한 인정을, "기준이 흔들리는 기관장"에게는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양면의 도구가 됩니다.

2. 함께 추진할 사항

【A. 기관장 평가 · 인정 시스템】

1. 기관장 평가제 도입 (교사·학부모 익명 평가, 교육청에서만 열람)
2. 우수 기관장 표창 · 인센티브 제도 신설 (긍정적 평가 강화)

3. 국공립 기관장 재위탁 시 평가 결과 반영
4. 교사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신고자 신원 보호

【B. 기관장 지원 · 교육 강화】

5. 기관장 의무교육 신설 (연 1 회, 노무·인권·소통)
6. 기관장 자격 요건 정비 (보육·교육 현장 경력 권장)
7. 기관장 상담·지원 핫라인 운영 (운영 고충 해소)

【C. 명확한 기준 마련 (재량 → 명문화)】

8. 연차·병가 사용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9. 호봉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컨설팅
10. 시간외근무·휴게시간 운영 모범 사례집 제작

【D. 사립 운영의 투명성 제고】

11. 회계 공시 시스템 정비
12. 정기 감사 대신 컨설팅형 점검으로 전환
13. 우수 운영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3. 권한 · 예산 · 실현 가능성

- 권한: 모든 항목이 시도교육감 지도·감독 권한 내에 있으며, 「기관장 자격·평가 관련 조례」로 안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거의 0 원 (기존 인력과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 가능)
- 효과: 현장 설문에서 지적된 문제의 약 70%가 이 시스템으로 해소됩니다.
- 시점: 임기 1 년 차 내 시범 도입 가능합니다.

VI. 부수 공약 3 가지

아래 3 가지는 시스템·예산·법령 정비가 추가로 필요한 항목으로, 핵심 3 대 공약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고경력자 채용 시 인건비 추가 지원, 호봉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블라인드 채용 권장 등을 통해 경험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권한: 교육감 권한 / **예산:** 예산 일부 필요

2. 사립 · 민간 · 가정 호봉제 준수 지원

호봉표 준수 기관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권한: 교육감 권한 (조례·예산) / **예산:** 예산 일부 필요

3.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 운영 모범 사례 확산, 임신기 단축근무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교사가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권한: 교육감 권한 + 입법 건의 / **예산:** 0 원 (행정)

Ⅶ. 마치며

저출산 시대를 헤쳐 나가는 핵심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곧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협회는 교육감님이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교사도, 기관장도, 학부모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본 협회는 교육감님께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본 요청서 3 대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2. 공약 2 번(부천 사건 재발 방지)의 **구체적 시행 시점 검토**

3. 당선 후 **100 일 이내 협회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

교육감님의 결단과 헌신이 영유아교사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 04. 28.

영유아교사협회 일동